

# 한국당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 정국 급랭

###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고용세습 국조 놓고 입장차 한국당, 오늘 의총서 결정... 예산심사·민생법안 줄줄이 제동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을 불과 2주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모여 국회정상화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더욱이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날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히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국회 보이콧 방안을 논의했다.

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심정적으로는 한국당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시찰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 관련 여야 협상이 결렬되고 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마저 보이콧을 시사하자 "여당에서 국정조사를 받아줘야하지 않나"라고 여당에 책임을 돌리며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잘못된 것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면 될텐데 (여당에서) 굳이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3가지 조건 중 다른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인사 문제니 양보해도 국정조사는 이렇게 얘기할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손 대표는 국회 보이콧과 관련,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 대해 "제1야당의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정쟁의 도구로 삼더니 이번에는 상임위 활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리고 있다"며 "국회가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명래 장관 임명 등 대통령 인사를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가 고용세습 국조 등 국회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충돌하다 보니 다음 달 2일을 법정시한으로 두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상임위가 전면 중단되면서 당분간 주요 민생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해찬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기대" 민주당 최고위... "예산 심사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북측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20년 전 금강산관광이 처음 열릴 때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금강산을 관광할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개성공단도 재개돼 많은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어젯밤 늦게 귀국했다"면서 "대통령이 외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합심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예결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여러 염려가 많다"며 "여야가 빨리 예결소위를 구성해 예산안 심사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 한국당 경제구상 'i노믹스' 발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 한국당의 경제 구상인 'i노믹스'를 발표했다.

i노믹스는 김 위원장이 주장해 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서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

i노믹스는 ▲민고 풀자 ▲바로 잡자 ▲키우고 열자 등 3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장은 '민고 풀자'는 주제 아래에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교섭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로 잡자'는 항목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 해체와

중장영준화 연대임금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공무원정원 동결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임금공개법을 제정하며,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체제 강화와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과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 하에 선진 과세체계 확립도 '바로 잡자'의 정책 내용에 포함됐다.

이밖에 '키우고 열자'의 정책 방향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교육개혁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획기적 결혼·출산장려금 도입과 청년지원 법률제정, 미래세대 참여 기본소득·연금개혁 논의기구 설립 등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i노믹스 추진위원회(기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혜경궁 김씨' 논란 확산... 민주당 "檢 결과 지켜보겠다"

### "트위터 사용자=李志사 부인" 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재명 경기지사과 관련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논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자가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때문이다.

이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예비 주자였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거운 출근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으로서 이 지사 문제가 곤혹스러운 것은 무엇보다 지지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의 폭발성 때문이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시작해 경기지사 후보 경선까지 이어진 '친문(문재인) 대 비문'의 갈등이 '혜경궁김씨' 문제를 빌미로 다시 불거지면 당의 균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정당대회 때 이해찬 대표를 이 지사 측이 측면 지원했다는 점에서 당의 역학구도에도 영향을 불가피하다. 또 미투 파문에 휘말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이 지사까지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 것도 민주당으로서 부담이 크다.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

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운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육설에 가까운 글을 SNS에 대량 살포한 이재명 부부는 더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부도덕한 인물을 공정한 민주당에도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주승용,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

### "특별위 총리 소속 설치"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국회부의장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19일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치유·상생'을 위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전남지사 소속으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자금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령 사업과 여순사건 사료

관의 운영·관리, 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추가진상조사 및 문화·학술 활동 지원, 유가족 복지 사업을 위한 재단설립에 정부 자금을 출연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 의원은 "여순사건의 발단이 된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지만, 여순사건은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라도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와 유족, 지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과는 별도로 지난해 4월 정인지·이용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토지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